

#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및 시사점

2026.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 기획조사팀 김재휘 과장, 전영호 과장

조언자 : 김경근 기획조사팀장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six vertical bars of varying heights and colors (dark blue, light blue, white, dark blue, light blue, dark blue) arranged horizontally. In the center, there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black border containing the text '목 차' (Table of Contents) in black Korean characters.

**목 차**

**[ 요약 ]**

**I. 검토 배경 ..... 1**

**II.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 ..... 2**

**III.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 5**

    ① 고용·문화 정주여건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 5

    ② 제한적인 인구유입과 인구 재생산 기반 약화 ..... 8

    ③ 중추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 및 권역별 고용정주여건 격차..... 10

**IV. 평가 및 시사점 ..... 12**

< 참고 >

1.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요약]

- ① **[검토배경]**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북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71.4%)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익산시 또한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②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5(2025년 기준)로 17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낮으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소멸위험단계 이하에 해당한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자연감소로, 2016년 이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면서 자연감소 폭이 지속 확대되어 2024년에는 순유출(-0.6만명)의 약 1.8배 수준(-1.0만명)에 달하였다. 연령별로는 20~39세 청년층의 순유출이 10년(15~24년)간 누계 8.7만명으로 가장 크고, 유출 방향은 수도권과 중부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전북지역 지방소멸 특징]** 전북지역 지방소멸은 ①고용·문화 정주여건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②제한적인 인구 유입과 재생산 기반 약화, ③중추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 및 권역간 격차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20~39세) 유출 규모(-8.7만명, 15~24년 누계)는 8개 도 중 세 번째로 크며, 남녀 모두 고르게 유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주 희망 사유 중 구직(61.0%)과 문화(23.8%) 비중이 전국(31.6%·19.5%) 대비 높았는데, 이는 청년 고용률·임금 수준·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문화기반시설 공급은 양호하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데 기인한다.

또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유입 규모는 8개 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전입 동기도 가족 요인 비중이 높아 생산연령층의 유입 동력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혼인 위축으로 신혼부부 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동부·서남부권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나, 중추도시권 역시 역외로 순유출되어 전북 전체 인구 유지에 한계를 보인다. 권역 간 경제 기반·고용의 질·생활 인프라 격차가 이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 ④ **[평가 및 시사점]** 전북의 인구감소는 청년 유출, 재생산 기반 약화, 공간적 양극화가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청년층 역외 유출 억제를 위한 고용의 질 제고 및 문화·여가 여건 개선, ②인구 유입 경로 다변화 및 혼인·출산·양육 여건 개선, ③동부·서남부권의 기초 생활인프라 유지와 생활인구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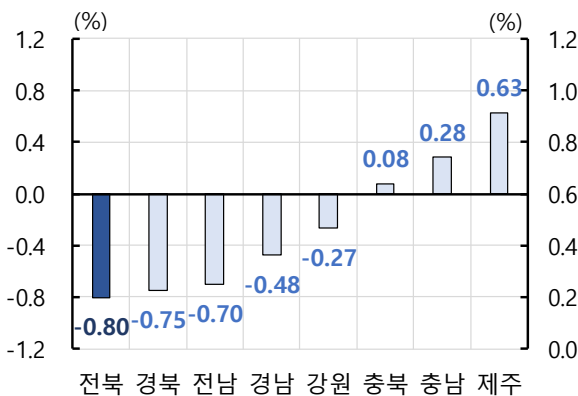
# 1. 검토 배경

1.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87만명에서 2025년 17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감소율은 0.80%로 8개 도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경북(-0.75%), 전남(-0.70%)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충북(+0.08%), 충남(+0.28%)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여 도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 이러한 인구감소의 결과 정부는 2021년 전북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다.<sup>1)</sup> 이는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남(72.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익산시 또한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주 시·군산시·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전역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데다, 인구감소는 일단 본격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3. 이에 본고에서는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인구 증감(자연증감, 인구이동) 요인을 살펴본 후, 청년 유출, 인구 유입·재생산 기반, 도내 권역별 격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북 지방소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북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8개 도 중 최하위 전북의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8개 도 중 2위

[그림 1] 8개 도 연평균 인구증감률<sup>1)</sup>

[표 1] 8개 도 인구감소지역 비중



	인구감소 지역(A)	전체 시·군·구(B)	비중 (A/B)
전남	16	22	72.7%
전북	10	14	71.4%
경북	15	22	65.2%
강원	12	18	66.7%
경남	11	18	61.1%
충남	9	15	60.0%
충북	6	11	54.5%
제주	0	2	0.0%

주: 1) 2015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행정안전부

1) 정부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10월)하고, 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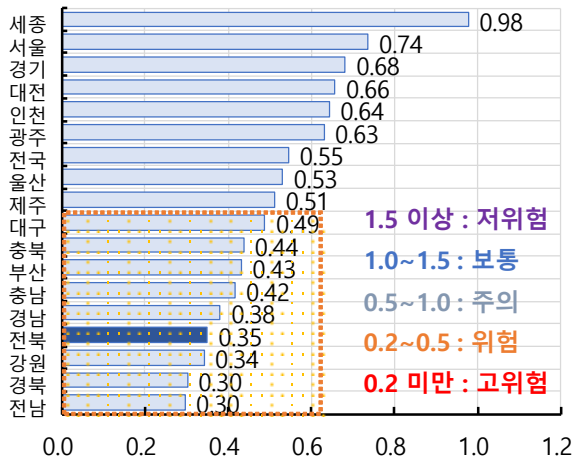
## II.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

4.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sup>2)</sup>는 0.35(2025년 기준)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해당하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보다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은 전남(0.30), 경북(0.30), 강원(0.34) 3개 도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0.55)보다 낮은 수치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지방소멸 위험단계 이하에 해당한다. 전주시(0.59)만이 지방소멸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실군(0.12), 장수군(0.13), 진안군(0.13) 등 7개 군 지역은 지방소멸 고위험단계(0.2 미만)에 진입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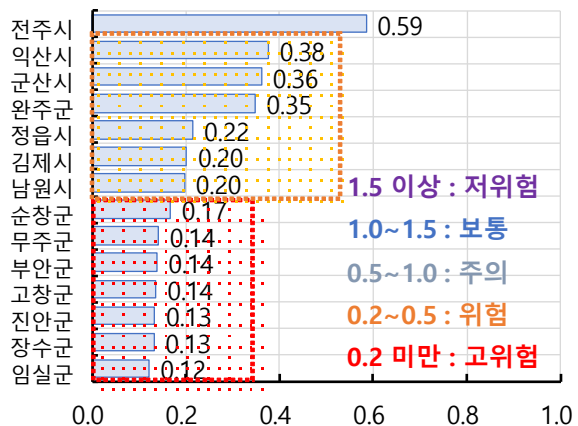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17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지방소멸 위험단계 이하에 해당

[그림 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sup>1)</sup>



주: 1)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3] 전북 시군별 지방소멸위험지수<sup>1)</sup>



주: 1)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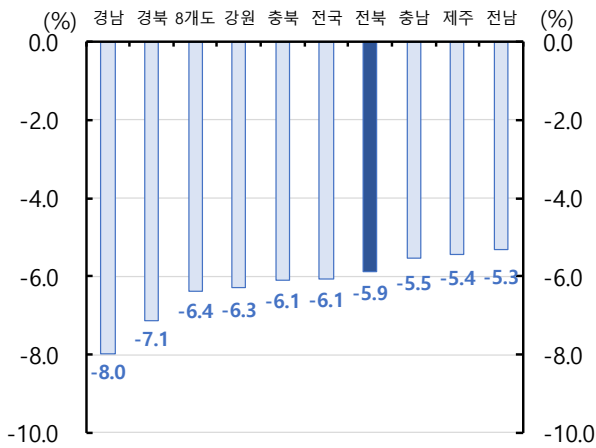
5. 전북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5년 0.64에서 2025년 0.35로 하락하여 연평균 감소율은 5.9%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6.1%), 8개 도(-6.4%)에 비해 다소 완만한 수준이나 충남(-5.5%), 전남(-5.3%)보다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은 2050년경 지방소멸위험 고위험단계(0.2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인구추계 결과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52년 0.19,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 기준 2052년 0.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시나리오간 차이가 미미한 것은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중으로 고위험단계 진입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2)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과 고령화 정도를 동시에 반영한다. 동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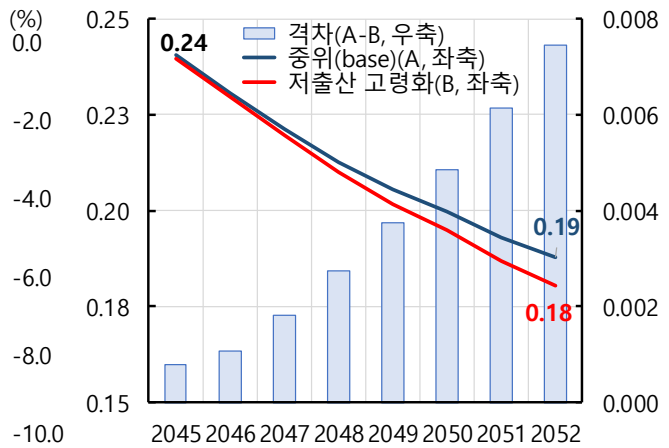
전북의 지방소멸위협지수 하락 속도는 8개 도 평균에 비해 완만한 편 전북은 2050년경 지방소멸위험 고위험단계 진입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연평균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율<sup>1)</sup>



주: 1) 2015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 전북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 전망<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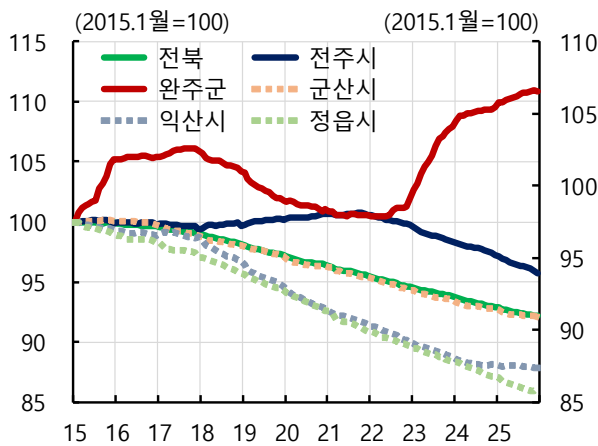


주: 1) 저출산 고령화 - 중위(base) 시나리오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6.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년 무렵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을 제외한 대부분 도내 시·군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5년 남·녀 합산 24%에서 25년 35%로 크게 확대된 반면, 20~39세 청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20%로 축소되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4%→7%)하고 10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감소(9%→5%)하는 등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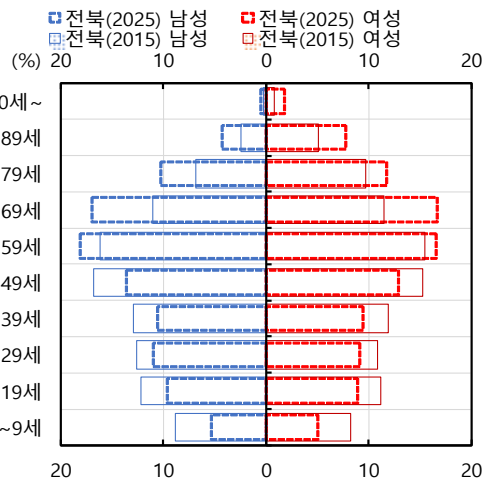
[그림 6] 전북내 주요 시·군 인구 추이<sup>1)</sup>



주: 1) 각 지역의 2015.1월 인구가=100으로 정규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북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가 동시에 진행

[그림 7] 전북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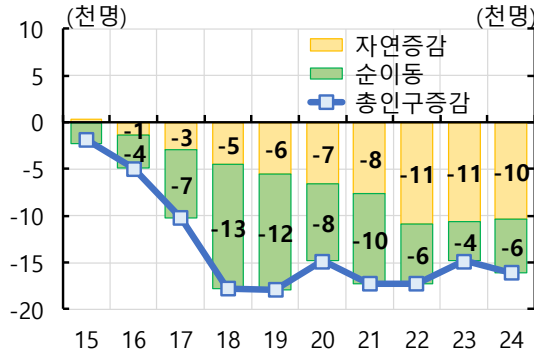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7. 전북의 인구 감소분을 분해해보면 2015년부터 자연증감의 비중이 커지고 순유출 인구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15년에는 순유출(-0.2만명)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4년에는 자연감소(-1.0만명)가 순유출(-0.6만명)의 약 1.8배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전북은 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한 이후 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2년 이후에는 연간 1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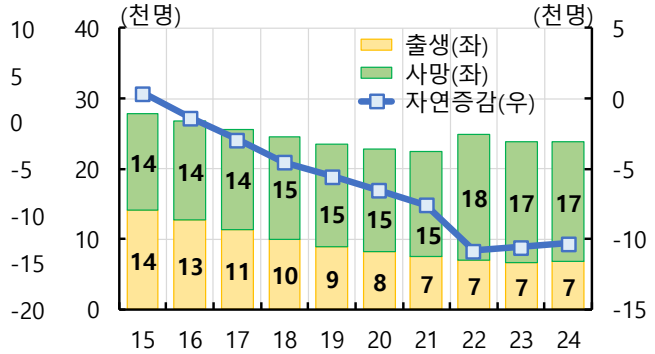
전북은 2015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8] 전북 인구 증감 요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9] 전북 인구 자연증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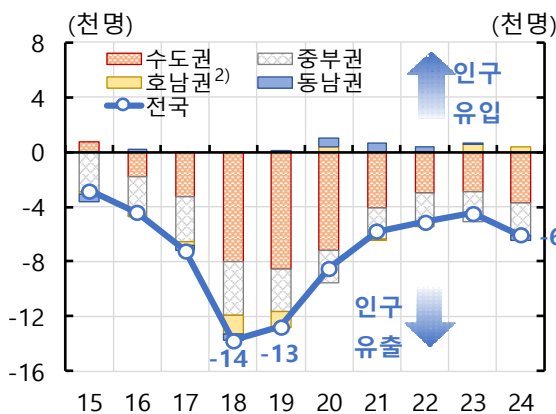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8. 전북은 인구 순유출 지역(2015~24년 누계)으로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진다. 순유출 규모는 18~19년 연간 1.3~1.4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sup>3)</sup> 24년 0.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유출 방향별로는 수도권과 중부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호남권·동남권과는 소폭의 순유출입이 반복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9세 순유출이 10년간 누계 8.7만명으로 가장 크고 0~19세도 0.7만명이 순유출되었으며, 40~64세(2.0만명)와 65세 이상(0.3만명)에서 순유입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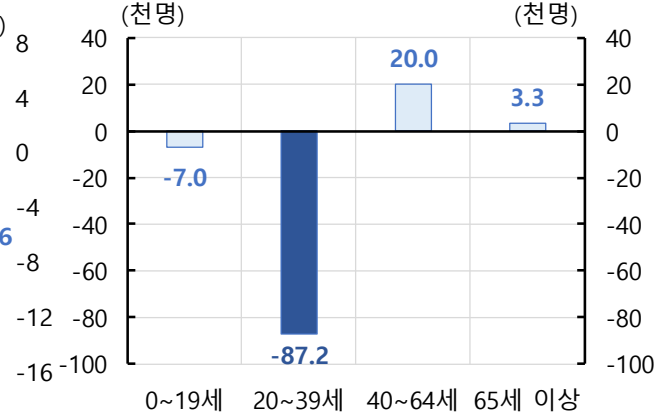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과 중부권 위주로 순유출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짐

[그림 10] 전북 순이동 지역별 분해<sup>1)</sup>



주: 1) 2015~24년 누계  
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순이동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1] 연령대별 전북 순유출 인구<sup>1)</sup>



주: 1) 2015~24년 누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3) 동기간 순유출 확대에는 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III.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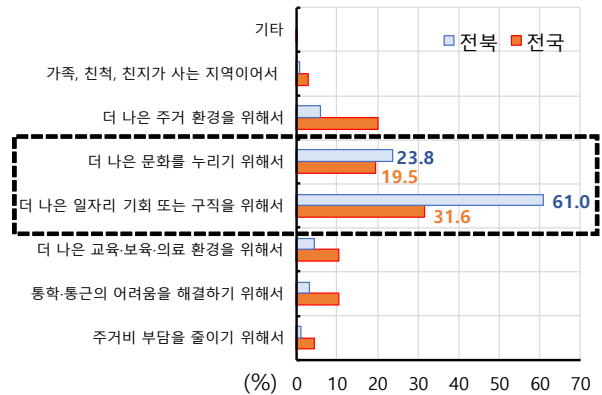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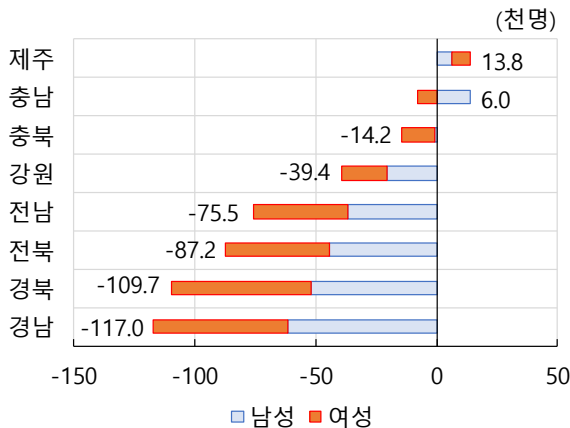
#### 1 고용·문화 정주여건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9. 전북지역의 청년인구<sup>4)</sup> 유출 규모(-8.7만명, 15~24년 누계)는 8개 도 중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남녀 모두 고르게 유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 기간 남성 4.5만명, 여성 4.3만명이 순유출되어 성비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청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년 중 타 지역 이주 희망자의 이유로는 구직(61.0%), 문화(23.8%)의 비중이 전국(31.6%·19.5%) 대비 높아 전북지역의 정주여건이 청년층의 전반적인 유출을 일으키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가 고르게 유출되는 양상은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산업구조보다 고용·문화 등 정주여건 전반의 취약성이 청년 이탈의 주된 배경임을 시사한다.

전북의 20~39세 순유출 인구는 8개 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 청년층은 구직, 문화를 이유로 타 지역 이주 희망

[그림 12] 20~39세 순유입/유출 인구

[그림 13] 전북지역 이주 희망 청년들의 이주 희망 이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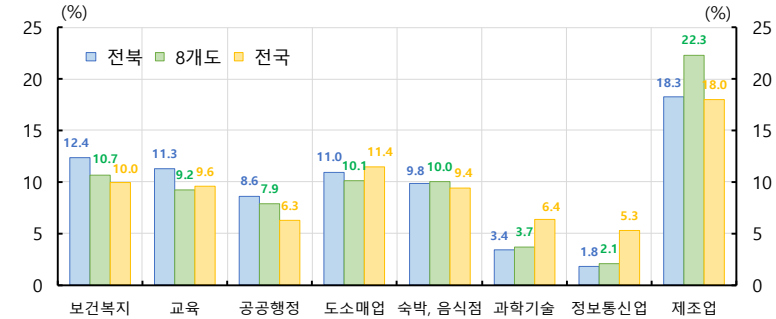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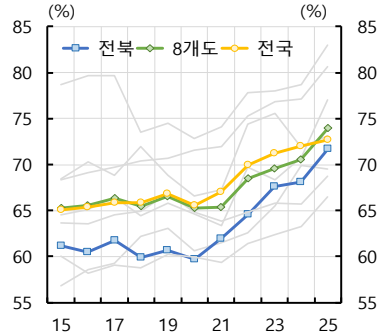
주: 1) 2015~24년 누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2024년 기준  
자료: 청년실태조사(국무조정실)

10. 먼저 고용 측면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71.7%(25.3/4분기 기준)로 전국(73.9%), 8개 도(72.7%)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는 2015년 이후 10년간 지속되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었다. 청년층 취업자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 선호 고부가가치 산업(정보통신업, 과학기술업 등)의 비중이 낮고 공공행정,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 공공·생활밀착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비중도 8개 도 평균보다 낮아 청년 흡수력이 있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4) 본 보고서의 청년인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18~39세)를 따르되, 인구 통계 자료가 주로 10세 단위로 편제됨을 고려하여 20~39세 인구로 정의하였다.

전북의 20~39세 고용률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청년 선호 업종 취업 비중도 낮은 수준  
 [그림 14] 20~39세 고용률<sup>1)2)</sup> [그림 15] 전북지역 20~39세 취업자의 업종별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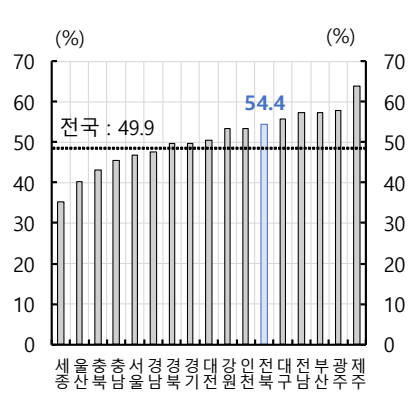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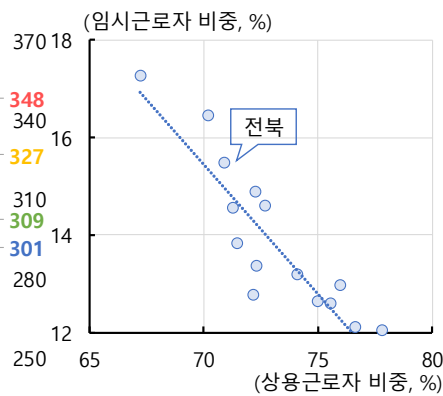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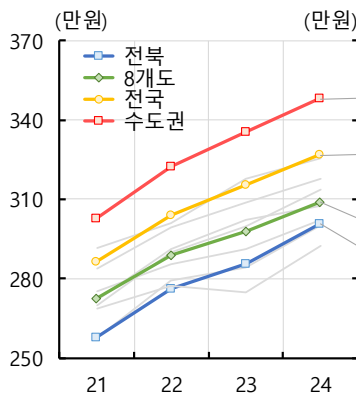
주: 1) 2025년 수치는 3/4분기 기준  
 2)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11.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전북지역은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01만원(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327만원), 8개 도(309만원)를 하회하며, 수도권(348만원)과의 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비중(70.9%)이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치는 반면 임시근로자 비중(15.5%)은 3위를 기록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54.4%로 전국(49.9%)을 상회하며, 8개 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북 일자리가 영세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북 청년층의 높은 구직 사유는 청년 선호 업종의 부족, 낮은 임금 수준, 취약한 고용 안정성 등 고용 여건의 복합적 열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청년층은 낮은 임금, 높은 임시직 비중, 영세사업체 집중으로 고용 취약성 노출

[그림 16] 권역별 청년 임금 추이<sup>1)2)3)</sup> [그림 17] 시·도별 임시, 상용근로자 비중<sup>1)2)3)</sup> [그림 18] 시·도별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sup>1)2)</sup>



주: 1) 20~39세 상용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급여 기준  
 2) 연도별 하반기 기준  
 3)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주: 1) 각 점은 17개 시·도  
 2) 2024년 하반기 기준  
 3) 20~39세 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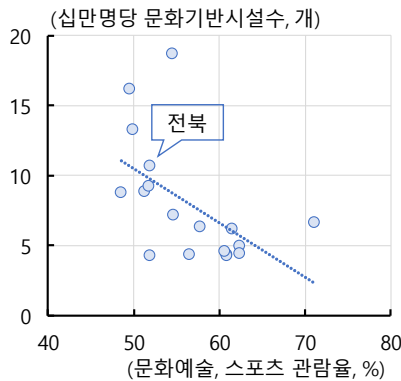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2) 20~39세 근로자 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12. 다음으로 문화·여가 측면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문화기반시설 공급은 양호하나 시설 대비 이용률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10.7개)는 전국(6.4개)을 상회하며 8개 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율(51.8%)은 전국(57.7%)을 하회하고,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 비율(84.0%) 또한 시설 공급 수준에 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존 문화시설의 양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실제 여가 수요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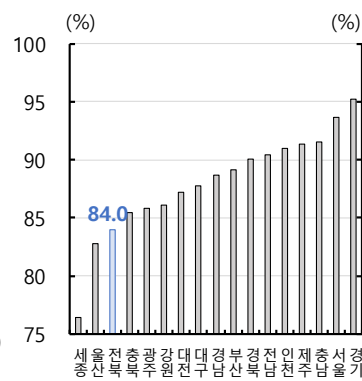
13. 민간 여가 콘텐츠 시장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여가업종 사업체당 매출액(2.8억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 문화·상업 콘텐츠 공급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청년층의 이주 희망 사유 중 더 나은 문화·여가 여건을 찾고자 하는 응답 비중(23.8%)이 높은 점도 이러한 공공·민간 문화 인프라의 복합적 한계와 연관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문화기반시설 공급은 양호하나 수요측면에선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여가 콘텐츠 시장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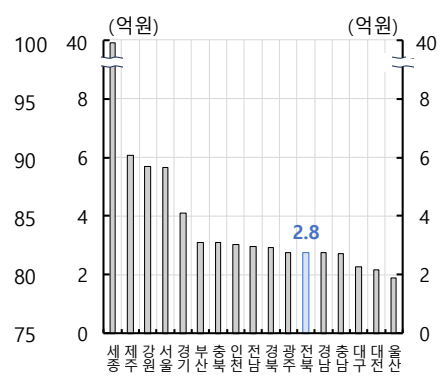
[그림 19] 시·도별 문화기반시설수<sup>1)</sup>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율<sup>2)</sup>



[그림 20] 시·도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 비율<sup>1)2)</sup>



[그림 21] 시·도별 여가업종 사업체당 매출액<sup>1)</sup>



주: 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 각 점은 17개 시·도  
3) 문화기반시설수는 2023년 기준,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율은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공공문화시설 이용 여부에 '이용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2)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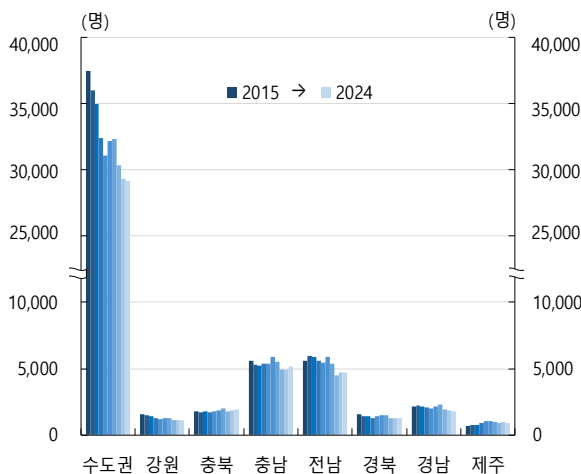
## 2 제한적인 인구 유입과 인구 재생산 기반 약화

14. 전북으로의 전입 규모(시·도간 전입자 수 기준)는 2015년 6.9만명에서 2024년 5.4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1.1만명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15년 대비 24년). 한편 세종(+0.05만명), 제주(+0.02만명) 등 일부 지역에서 전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15. 순이동(전입-전출) 기준으로 보면 중장년층(40~64세)에서 순유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청년층(20~39세) 순유출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중장년층은 2015~24년 누계 기준 2.0만명 순유입되었으나 중장년층 인구(15~24년 평균) 대비 유입률은 2.8%에 그쳐 8개 도 중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북의 청년층 순이동(-8.7만명) 대비 중장년층 순이동(+2.0만명) 비율<sup>5)</sup> 또한 -4.4를 기록하며 8개 도 중 가장 낮은 모습이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입·전출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 중장년층 순유입의 인구 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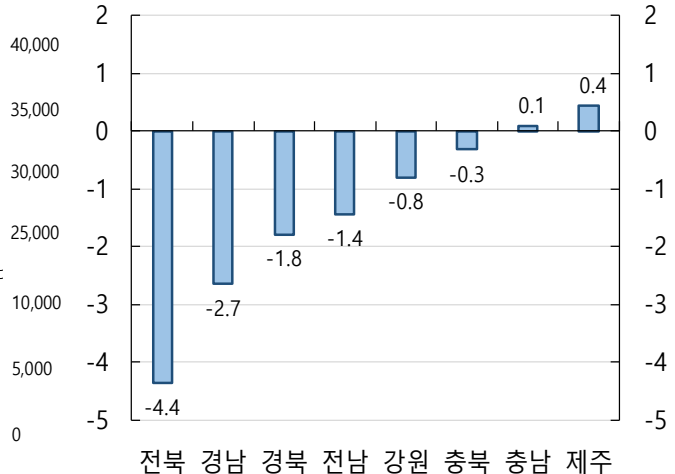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입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 중장년층 순유입의 인구 확충 효과는 제한적

[그림 22] 지역별 전북으로의 전입자 수 추이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합계  
2)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생략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3] 중장년층 순이동 대비 청년층 순이동 비율<sup>12)</sup>



주: 1) 2015~24년 누계 청년층 순이동/중장년층 순이동  
2) (-)값은 청년층 순유출, 중장년층 순유입을, (+)값은 청년층 순유입, 중장년층 순유입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5) 시·도별 순이동 누계(15~24년)를 이용하여 '청년층 순이동 / 중장년층 순이동'으로 산출하였다. 8개 도 모두에서 중장년층 순유입(+)이 발생하였음에 따라 해당 값이 음(-)이면 청년층 순유출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절댓값이 클수록 청년층 순유출 규모가 중장년층 순유입 규모를 크게 상회하였음을 의미한다.

16. 전북은 전입 사유에서 가족(동거·부양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6)</sup>(24년 기준). 8개 도와 비교하면 전북은 직업 및 주택 사유 비중이 모두 8위로 낮은 반면, 가족 사유 비중은 3위로 높았다. 가족 사유 전입은 취업·교육 등과 직접 연계된 전입에 비해 전입 이후 가구 형성·출산으로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기반 확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북의 순이동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흐름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17. 이러한 제한적 유입 구조와 더불어 전북의 인구 재생산 기반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2024년 전북의 조혼인율은 2015년(4.9건) 대비 약 1.2건 감소한 3.7건으로, 8개 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20~39세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8.1%에서 2024년 9.9%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인구 재생산의 핵심 연령층인 청년층이 혼인·가구 형성 등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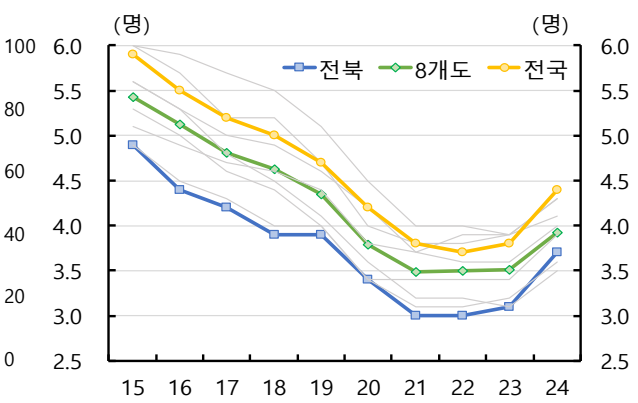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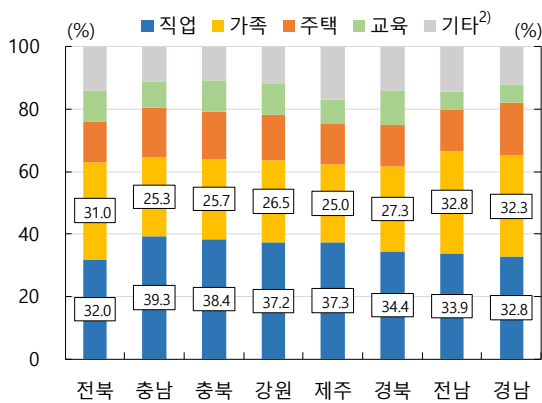
18. 전북의 인구 재생산 기반 약화는 신혼부부 자체의 감소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2024년 0.88명으로 2015년 대비 19.3% 감소하였음에도 전남(0.93명)에 이어 8개 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북이 여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혼인 이후 출산 강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신혼부부 수는 2015년 대비 40.3% 줄어들며 8개 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북은 가족 사유 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북의 조혼인율은 낮은수준에서 하락세를 지속

[그림 24] 8개 도 전입 사유별 비중<sup>1)</sup>

[그림 25] 지역별 조혼인율<sup>1)2)</sup>



주: 1) 2024년 기준  
 2) 기타 항목은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항목의 합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천명당 혼인건수  
 2)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6) 전북으로의 전입 동기는 직업(전체 전입의 32.0%), 가족(31.0%), 주택(12.9%), 교육(10.2%) 순으로 나타났다.

### 3 중추도시권<sup>7)</sup>으로의 인구 집중 및 권역별 고용·정주여건 격차

19. 전북지역 내 인구이동 양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으로의 인구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 이동행렬(transition matrix)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연평균(2015~2024년) 544명, 서남부권(정읍·고창·부안)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연평균 658명이 순유입되었다. 역내 이동 규모에서도 중추도시권(129,405명)이 동부권(7,696명)과 서남부권(10,045명)을 크게 상회하여 인구 유동성 측면에서도 권역 간 격차가 확인된다. 다만 중추도시권 전체로 보면 역외(타 광역시·도)로 연평균 6,161명이 순유출되고 있어 전북 내 인구를 흡수(연평균 1,202명 순유입)하면서도 이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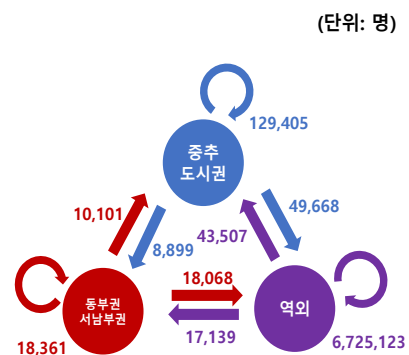
동·서남부권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순유입되나 역외로는 순유출 지속

[표 2] 권역간 인구 이동행렬(2015~24년 평균)

[그림 26] 전북 권역간 인구이동<sup>1)2)</sup>

전출지 (FROM) \ 전입지 (TO)		전북(역내)				타 광역시·도 (역외)
		중추권	(전주)	동부권	서남부	
전북 (역내)	중추권	129,405	64,193	5,212	3,687	49,668
	(전주)	64,009	52,574	4,212 <sup>1)</sup>	2,258	22,255
	동부권	5,756	4,690	7,696	323	8,635
	서남부	4,345	2,702	297	10,045	9,433
타 광역시·도 (역외)		43,507	19,337	8,456	8,683	6,725,123

주: 1) 전주(전출지)에서 동부권(전입지)로 이동한 인원(전주→동부권)이 연평균 4,212명임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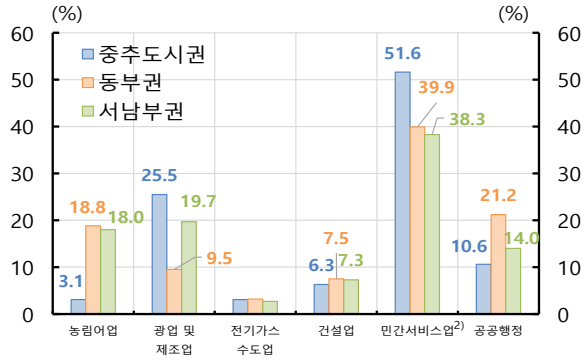
주: 1) 회전하는 화살표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  
 2) 2015~24년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20. 이러한 인구 양극화는 권역 간 경제 기반과 고용 여건의 격차로부터 기인한다. 중추도시권의 총부가가치는 전북 전체 대비 77.6%(2022년 기준, 실질)를 차지하는 반면, 동부권은 10.5%, 서남부권은 12.0%에 그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동부권과 서남부권은 제조업 비중(각각 9.5%, 19.7%)이 중추도시권(25.5%)에 비해 낮고, 공공행정 의존도(각각 21.2%, 14.0%)는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제한적이다. 고용의 질에서도 격차가 확인되는데, 동부권·서남부권은 중추도시권 대비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71.2%·67.1% vs 59.1%, 24년 하반기 기준)과 단순노무 비중(36.6%·26.8% vs 18.1%)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중(59.7%·66.4% vs 71.6%)은 낮아 고용의 질적 격차가 뚜렷하다.

7) 본고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주권(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을 중추도시권으로, 나머지 지역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권역구분을 참고하여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과 서남부권(정읍·고창·부안)으로 구분하였다.

중추도시권은 여타 권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동·서남부권의 영세사업체·단순노무 집중과 낮은 반면 동·서남부권은 공공행정 비중이 높음  
 용근로자 비중

[그림 27] 권역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중<sup>1)</sup>



[표 3] 권역별 고용의 질 지표<sup>1)</sup>

	(% )		
	중추도시권	동부권	서남부권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	59.1	71.2	67.1
단순노무 비중	18.1	36.6	26.8
상용근로자 비중	71.6	59.7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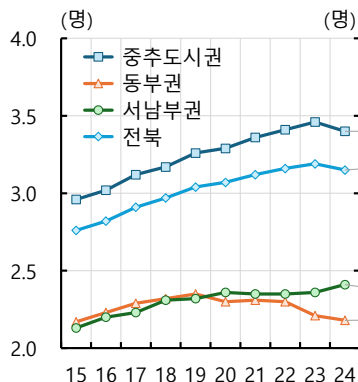
주: 1) 2022년(실질) 기준  
 2) 전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에서 공공행정 부문의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시산  
 자료: 전북특별자치도청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저자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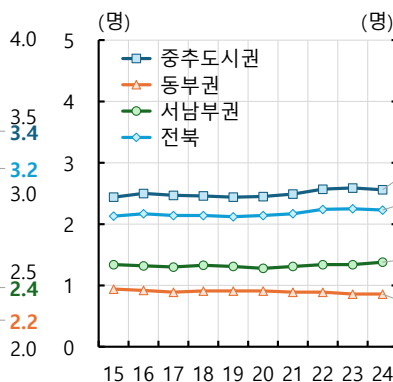
**21. 경제·고용 여건의 격차에 더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권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의료 접근성의 경우 24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중추도시권(3.4명)이 동부권(2.2명)과 서남부권(2.4명)을 상회하며, 특히 동부권과의 격차는 15년 1.4배에서 24년 1.6배로 확대되었다. 교육 인프라에서도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가 중추도시권(2.6개)에 비해 동부권(0.9개), 서남부권(1.4개)이 크게 낮아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가구의 중추도시권 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 환경 역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동부권(41.9%)과 서남부권(47.4%)에서 중추도시권(33.5%)보다 높아, 정주 여건의 복합적 열위가 확인된다. 이러한 공간적 양극화는 동·서남부권의 정주 기반을 약화시켜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추도시권 대비 동·서남부권의 낮은 의료·교육 인프라와 높은 노후주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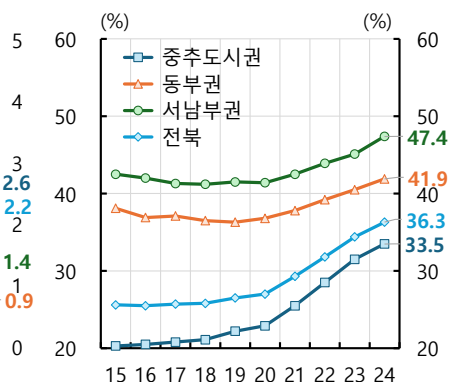
[그림 28] 권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그림 29] 권역별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그림 30] 권역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 IV. 평가 및 시사점

22. 전북지역의 인구감소는 청년 유출, 재생산 기반 약화, 공간적 양극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상호 연계되어 심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와 문화·여가 여건 미흡으로 청년층이 역외로 이탈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유입도 제한적인 가운데 신혼부부 감소로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동부권·서남부권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나, 중추도시권 역시 역외로 순유출되면서 전북 내 인구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3.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6%(25년 기준)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195만원, 25년 기준)도 전국 평균(225만원)을 하회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자체 세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 압박이 가중<sup>8)</sup>되고, 이로 인한 공공서비스·생활 인프라 축소는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4. 이와 같은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와 문화·여가 수요 충족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용 측면에서 전북 청년층의 역외 이탈은 고용의 질적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 지역 거점대학과 역내 기업 간 채용연계형 인턴십·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인재의 역내 취업을 유도하고, 기존 제조업체의 R&D 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sup>9)</sup>

한편, 문화·여가 측면에서는 시설의 양적 공급보다 청년층의 실제 이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기존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을 청년 선호형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관람 콘텐츠를 확충하며,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sup>10)</sup> 아울러 지역 청년 창작자·소상공인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 참여형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방문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여가 소비가 역내에서 순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8)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52년 인구 1인당 재정부족액은 전북이 135만원으로 전국 평균(53만원)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미래연구원)
- 9)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24.2월)와 기회발전특구(25.7월)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역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남원시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드론·SW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항공·모빌리티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 10) 전주시는 아중도서관 리모델링(24.4월)을 통해 기존의 열람실 중심 구조를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카페형 좌석을 배치하는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재편한 사례이다.

**25. 또한 중장년층·외국인 등 역외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정착한 청년층의 가구 형성 및 양육 여건을 조성하여 재생산 기반 약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의 40세 이상 순유입 규모는 8개 도 중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 유출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귀향·귀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연근무형 일자리 매칭, 귀농·귀촌 사전교육 및 정착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역내에 취업·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구 유입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sup>11)</sup>

한편 전북의 출생 기반 약화는 출산 행태의 변화보다 신혼부부 자체의 축소에 기인하는 만큼, 정착한 청년층이 가구를 형성하고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보 제공 및 수요 맞춤형 주거 상담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6. 마지막으로 권역 간 인구 양극화에 대응하여 중추도시권의 역외 유출 억제와 동부·서남부권의 기초 생활인프라 유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추도시권은 도내 인구를 흡수하면서도 역외로 순유출되는 구조인 만큼, 앞서 제시한 고용·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중추도시권에 우선 집중하여 전북 전체의 인구 유지 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부·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교육·주거 인프라의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성 악화가 우려된다. 다만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의료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교육 측면에서는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주거 측면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인구 감소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안이 요구된다.<sup>12)</sup> 아울러 관광객·귀향 방문객 등 생활인구<sup>13)</sup>를 지역 내 소비 혜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보완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

11)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은퇴 전후 5060세대를 지역 기업과 매칭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 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등 참여).

12) 전북지역에서는 농촌 왕진버스(무주·부안), 어울림학교를 통한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협력, 빈집 리모델링과 취약계층 무상임대에 기반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순창·정읍 등)이 추진되고 있다.

13)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남원시는 '누리시민' 제도를 통해 생활인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생활인구에 관광지 입장료·식음료 가맹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인구 등록자수가 15만명(25년 말 기준)을 넘어섰다.

## 참고 1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며, 2021.10월 전국 89개 시·군·구가 최초 지정

- 지정 기준은 ①연평균 인구증감률, ②인구밀도, ③청년 순이동률, ④고령화 비율, ⑤유소년 비율, ⑥조출생률, ⑦재정자립도 ⑧주간인구 등 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22년부터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 지원, 세제·규제 특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전국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권역 <sup>1)</sup>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시, 사천시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청읍시, 진안군	익산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 금정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2)	강화군, 옹진군	동구

주: 1) ( ) 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수  
 자료: 행정안전부

## [참고문헌]

- 김예진(2025),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경기본부
- 서병우·최환준·윤내열(2025), “전북, 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 양재운·김명동(2025), “최근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 유영철(2022), “경북 울진·울릉·영덕군 인구감소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포항본부
- 이선화(2025),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5-11호
- 이형구·배한이(2022),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정민수·김의정·이현서·홍성주·이동렬(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 조광래·최재혁(2024),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최문정·안상현(2023), “울산 인구감소의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한국은행 울산본부
- 황운중·정호진·박다희(2023),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전북본부